

보도시점 2026. 7. 15.(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6. 7. 14.(화)

청년이 바꾸는 화학안전정책... 전문가 조언단과 정책 제안 첫걸음

- 화학안전정책 청년포럼 발족식 개최, 55인 청년 및 민관 전문가 참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화학안전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 청년포럼’ 발족식 겸 오리엔테이션을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포럼 참가자의 주제 선정과 제안 발표를 위한 사전 교육 성격으로 마련됐으며, 참여가 확정된 20개 팀과 민관 전문가 조언(멘토)단, 화학안전정책포럼*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화학안전정책의 논의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활동(거버넌스)으로, 2021년부터 운영되어 화학안전 제도 개선방안 논의

청년포럼은 화학안전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 청년의 참신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청년포럼 참가자들은 서면심사를 통해 2.1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되었으며, 향후 정기 모임과 주제별 토론, 전문가 조언(멘토링), 정책 제안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청년포럼 운영기간 동안 ‘화학안전정책포럼’의 공개토론회, 이해당사자의 날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전문가 조언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화학안전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정책 아이디어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참여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상금을 포함한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청년포럼은 미래세대가 화학 안전정책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고민하고 제안하는 참여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청년들의 새로운 시각과 전문가들의 경험이 만나 보다 발전적이면서도 현장 여건까지 고려한 정책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화학안전정책 논의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화학안전 청년포럼 발족식 개최 계획.
2. 화학안전정책포럼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770)
		담당자	사무관	박주현 (044-201-6789)



□ 개요

- (목적) 청년포럼 참가자의 주제 선정 및 제안발표를 위한 사전 교육으로, 화학안전정책 현안 및 주제 등 포럼 전반에 대한 이해도 증진
 - *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을 통해 팀별 주제(화학안전 관련 정책 제안 등) 선정 예정
- (일시/방식) '26. 7. 16(목) 14시~16시 / ZOOM
- (참석자) 참가자 20팀, 청년포럼 멘토단 11명, 기후부, 운영기관 등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부	13:30~14:00 (30')	참가자 등록 및 입장, Zoom 환경 테스트	
	14:00~14:05 (5')	오프닝_(사회자) 참가팀 소개, OT 안내	화학물질정책포럼 운영기관
	14:05~14:10 (5')	환영 인사	기후부 화학물질정책과장
	14:10~14:20 (10')	화학안전정책 청년포럼 및 운영 과정 소개	김기태 교수
	14:20~14:40 (20')	화학안전정책포럼 소개 및 주제 설명	화학물질정책포럼 운영기관
	14:40~14:55 (1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4:55~15:00 (5')	휴식	
2부	15:00~15:35 (35')	멘토와의 대화	민·산·관 멘토단
	15:35~15:50 (15')	참가팀 계획 발표 및 기념촬영	
	15:50~16:00 (10')	화학안전정책 청년포럼 향후 일정 안내	

□ 향후 계획

- 대면 워크숍(8.13) 및 참가자별 토론회 개별 참관(7~9월)
- 팀별 제안 발표(9.17) 및 시상(화학안전주간 계기, 기후부장관상장 등)

□ 추진 배경

- 화학규제에 대한 산업계-시민사회 입장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민·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 필요

⇒ 민·산·관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화학안전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화학분야 중요 정책의제를 공식 논의
⇒ 상호 신뢰 하에 국민 안전은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제도 마련

□ 주요 경과

- ('21년) “범국민 소통·협력 플랫폼”을 구성, 시범 운영('21.5월~12월)
- ('22년) 민·산·관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22.12)”하여 현장 적용성 및 제도 수용성 강화
- ('23년) '22년 합의안 등을 반영한 화평·화관법 개정안 마련
- ('24년)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화학사고 신고·처벌 개선방안 등 논의
- ('25년) 화평법 개정·시행 정착방안, 화학사고 신고·처벌 개선방안 등 논의

□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체계

- (기획위원) 기후부, 산업계(4), 시민단체(4)로 구성(산업계·시민단체 기후부 장관 위촉, 매년 1월)
- (토론 운영) 주제별 공개토론회, 열린대화, 종합토론회 등 개최

